

“정의선 회장, 그룹사 지부·지회 공동교섭 나오라”

그룹사 차별철폐, 공동투쟁 승리 결의대회 ... 현대제철 다섯 지회 동시 게릴라 파업 경고

금속노조가 현대자동차그룹에 사회적책임 5대 요구와 그룹사 지부·지회 단체교섭 5대 공동요구를 전달하고, 공동교섭을 촉구했다.

노조는 현대·기아차 그룹사 지부·지회와 6월 2일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앞에서 ‘현대·기아차그룹사 차별철폐, 산업전환기 고용안정 쟁취, 그룹사 공동투쟁 승리,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열었다. 노조와 그룹사 지부·지회는 정의선 회장 등 현대차그룹이 공동요구 교섭에 나오지 않으면, 총파업·총력투쟁으로 대응한다고 경고했다.

노조가 요구한 현대차그룹 사회적책임 5대 요구는 ▲그룹사 차별 서열화 노무관리 중단·코로나 위기 극복 동일 성과금 지급 ▲산업전환기 부품사 고용안정 ▲기후위기 극복 책임 경영 ▲해외투자 상응 국내 투자 미래일자리 확보 ▲미래지향 노사관계 정립 등이다

노조 그룹사 지부·지회 단체교섭 5대 공동요구는 ▲기후위기·기술발전 산업전환기 고용안정 ▲신규인원 충원·정년 연장 ▲소비자 물가 인상 따른 생활임금 인상 ▲호봉급 제도 개선·이중 임금 폐지 ▲해고자 원직 복직·손배 가압류 철회 등이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대회사 를 통해 “현대자동차그룹은 대한민국 두 번째 재벌이다. 전체 계열사 노동자들의 땀과 헌신으로 이런 위상을 만들었다”라며 “코로나19 특별 격려금 동일 지급 쟁취를 그룹사 공동투쟁의 시금석으로 삼자”라고 강조했다.

윤장혁 위원장은 “정의선 회장은 전근대 악질 양재동 가이드라인 노무관리를 폐지하라”라면서 “과거 정몽구-윤여철 노무관리 방식으로 일관한다면 금속노조와 그룹사 지부·지회는 투쟁으로 떨쳐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윤장혁 위원장은 “금속노조는 재벌이 주도하는 무노조 자회사 방식, 해외투자 방식 산업전환 중단과 노동자 고용보장·노동중심 산업전환 정책 수립을 위한 노정교섭을 요구하고 있다”라며 “노정교섭 쟁취 총파업을 함께 조직하자. 현대·기아차그룹사

지부·지회 동지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호소했다.

김중복 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장은 투쟁사에서 “현대제철 노동자들은 고열과 분진 속에서 명절과 휴가도 없이 365일 공장을 가동한다. 하루 100여 명 코로나 확진자가 나올 때 조합원 동지들은 휴가를 반납하고 공장을 멈추지 않았다”라고 현장 상황을 설명했다.

김중복 지회장은 “현대제철은 5월 2일 교섭에서 지난해 성과금에 특별공로금을 포함해서 지급했다는 개소리를 지껄였다. 이게 쉬지 않고 일한 대가인가”라고 분노했다.

김중복 지회장은 “현대제철 다섯 개 지회는 이 투쟁에 사활을 걸었다. 전 조합원이 10만 원씩 결의해 8억 원의 투쟁기금을 모았다”라면서 “쟁의권 확보 전까지 사측이 해결하지 않으면 다섯 개 지회가 지난해 당진의 게릴라 파업을 뛰어넘는 게릴라 파업을 벌일 것이다. 제철을 넘어 그룹사 전체를 멈추는 투쟁에 앞장서겠다”라고 투쟁 계획을 밝혔다.

금속노조는 6월 22일 양재동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앞에서 ‘재벌독점 타파, 총고용 보장,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산별교섭 제도화 쟁취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연다.

법원, 불법파견 노동자 정규직 확인 판결 12년째 뚱개

현대차 불법파견 비정규직 우롱 사법부 규탄 기자회견 ... 민사 하급심이 대법원 판례 따르지 않아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울산비정규직 지회, 전북지부 현대차전주비정규직지회, 충남지부 현대차아산사내하청지회 등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세 지회가 사법부의 불법파견 노동자 정규직 확인 판결 지연을 규탄하고,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개선 투쟁을 결의했다.

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세 지회는 5월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삼거리에서 5, 6차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재판에 앞서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 우롱하는 사법부 규탄과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현대차 비정규직 세 지회는 “대법원은 자유, 평등, 정의를 사법부의 상징으로 내세우지만, 차별에만 자유를 부여하고 있다”라며 “작년부터 결심하던 민사 48부는 지난 4월 26일 재판을 이유 없이 연기했다. 십수 년 시간 끌면서 현대자동차에 엄청난 시간을 벌여주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세 지회는 “사법부는 노동자에게

최고량을 걸어 자유를 박탈하고, 사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평등을 차별하고, 사법부는 차별이 노동자를 착취할 정의를 지지 엄호한다”라고 규탄했다.

윤성규 현대차아산사내하청지회장은 기자회견 여는 말을 통해 “2010년 대법원판결 이후 벌써 12년이 지났다. 12년 동안 대법원이 세 번 더 불법파견 판결했는데, 하급심은 제대로 정규직 확인 선고를 하지 않는다”라고 분노했다.

윤성규 지회장은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의 요구는 분명하다. 불법파견 노동자 정규직 확인 판결, 현대자동차 정몽구·정의선 구속과 사과다”라고 강조했다.

윤성규 지회장은 “하급심은 하루라도 빨리 대법원 판례를 따라 선고해야 한다”라며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법원이 선고할 때까지 계속해서 투쟁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노조 비정규직 조합원들은 6월 8

일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요구를 전달할 계획이다.

소송을 맡은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의 유태영 변호사는 “현대차 아산공장 1, 2, 3차 소송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고, 9차까지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라며 “법원이 반복해서 확인한 법리는 대법원이 2015년 아산공장 판결에서 판시한 ▲현대차가 지휘명령을 했는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돼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했는지 등 근로자 파견 관계의 요소다”라고 설명했다.

유태영 변호사는 “완성사 자동차공장의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생산 특성상 대법원이 판시한 요소는 반드시 하급심이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며 “원청은 1차·2차 업체로, 직접·간접 생산으로 나눠 어떻게든 비정규직이 자동차 직접 생산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갈라치기 전략을 취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